

재정 압박 자치구 공유재산 헐값 매각

서구 백마산 14만4502㎡ 매각 추진... 18차례 유찰

남구·광산구도 매각 입찰자 없어 수차례 재공고

광주시 각 자치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 여파로 공유재산이 공개입찰에서 잇따라 유찰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매각을 강행,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져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서창동과 매월동 일대 백마산 일쪽 12필지 14만4502㎡에 대한 매각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난 25일까지 입찰자가 단 한 명도 없어 모두 18차례 유찰됐고, 지난 30일 19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백마산 일대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광산구 소유이던 공유재산을 서구가 이어받은 것으로, 지난 2008년 말 서구가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과 함께 의회의결을 거쳐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 이후 백마산 아래쪽 9필지 1만2475㎡는 지난 2009년 6억 8000만원에 팔렸다.

문제는 임야와 밭으로 구성된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매자가 나오지 않자 서구는 최초 34억7500여만원에 이르던 예정가격을 40%나 줄여 20억5300여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데 있다.

또 서구는 유찰이 계속될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하한선인 최초가격의 50%까지 가격을 낮춰서 매각을 강행할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남구도 올 7월 월산동 일대 3필지 66㎡를 매각하면서 입찰자가 없자 재공고했고, 광산구도 지난 2009년 장륙동 일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건물을 매각하면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4차례 이상 재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각 자치구들의 공유재산 '헐값 매각'이 자치구의 재산 감소와 장기적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서구청이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백마산 습지에는 광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보호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통발'이 자생하고 있어 민간에 매각될 경우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구는 이 외에도 올 들어 지난달까 지 22필지 2083㎡를 7억8000만원에, 지난해에도 6필지 2815㎡를 13억 8800만원에 각각 팔아넘겼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신청사 건립 등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빚이 있다"며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백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은대 광주시장은 최근 "시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대규모 시유지뿐 아니라 자투리땅도 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4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연날리기 대회'에 참가한 연 애호가들이 방패연을 이어 만든 줄연을 하늘 높이 날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인 어린이 집 운영권 수익원 받고 불법 매매

대표 등 5명 입건

운영권을 불법매매한 어린이집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어린이집은 원생 한 명당 보증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매매 및 임대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4일 "수익원을 받고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매매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모 법인 어린이집 대표 정모(여·60)씨와 정씨(여·62), 이들에게 운영권을 산 김모씨(여·31)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께 보증금 5억 66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에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료 300만원에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께 보증금 5억 66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에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께 보증금 5억 66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에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 운영권을 넘기면서 거액의 권리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인 법인 어린이집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대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등 일체를 지자체에 귀속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다.

또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운영권을 매매한 광주시 북구 양산동 모 법인 어린이집 대표 곽모(여·54)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곽씨는 지난 3월 보증금 1억 3000만원, 월 임대료 500만원에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매수자와 보증금 9억 5000만원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가 보증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교육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특색교육비를 받아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려청자 감정이 부풀린 전 박물관장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뺑뚱을 받고 고려청자 감정을 부풀린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자 박물관 전 관장 최모(6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자기를 고가로 감정해달라는 목시적인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허위감정을 청탁하지는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7년 이씨 소유의 '청자삼국연국모란문 상감주자'를 강진군청에 매매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감정가를 좋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대 강도범 휴대전화 놓고 갔다 멀리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의 휴대 전화를 빼앗아간 20대 강도범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흘리고 갔다가 이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경찰에 달미.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최모(24)씨는 지난 2일 새벽 광주시 남구 방림동 김모(여·30)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입술을 다치게 한 뒤 휴대전화 2대를 강탈해 도주했다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20분 만에 걸기.

○...경찰은 "강도범을 빨리 붙잡아 다행이다"며 "잡힐 줄 알면서도 본인 휴대폰에 전화를 하는 어설픈 범인이었다"고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못 믿을 농협 전산망

2~3일 이틀 연속 장애 서비스 중단

농협 전산망이 똑같은 프로그램 오류로 2~3일 이틀 연속 장애를 일으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농협은 "3일 0시30분부터 약 25분간 전산 장애로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 입출금기(ATM), 체크카드 결제 등 일부 서비스가 가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TM과 체크카드 서비스는 이날 0시41분께 재개됐고 인터넷뱅킹은 0시55분부터 정상화됐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전날 발생한 장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 지난 2일 장애는 야간 셋업(다음날 업무를 위한 전산작업) 과정에서 고액 계좌번호 검증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 일어났다. 이로 인해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결제 등 일부 서비스가 4시간가량 중단됐다.

한편 농협은 지난 4월 해킹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전산 마비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5월에도 인터넷뱅킹을 중심으로 한 전산장애와 전국적인 ATM 서비스 중단 등 각종 서비스 장애가 잇따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5·18 관련자 3명 재심서 무죄 판결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시민군 3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김용배 부장판사)는 4일 "1980년 5·18 당시 기동타격대의 시민군을 편성해 계엄군과 싸우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내란실행)로 기소된 오모(6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오, 계엄법 위반, 군무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97년 사망)씨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목포 문태학원 이사장 공금횡령 불구속 기소

광주지법 목포지청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목포 문태학원 이사장 문모(57)씨와 행정실장 배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학교재단 수익을 자신인 모 마트 임대료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3년간 공금 3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실장은 공금횡령 외에도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400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여검사 벤츠 받은 건 성매매”

할빈단 고발 “경찰이 검찰비리 수사하라”

광주경찰청, 부산지검 특임검사팀에 이첩

반부패국민운동 시민단체인 할빈단이 지난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36) 전 검사를 성매매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남편과 자식 있는 유부녀인 여검사가 부장관

사 출신 변호 선배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벤츠 외 제 고급승용차와 540만원 상당의 사넬렌드백을 받고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며 "또 이 과정에서 사건청탁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전 검사가 광주지검

치된 특임검사팀에 이첩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특임검사가 임명돼 관련 내용을 수사할 방침이어서 별도의 사건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벤츠 여검사 사건을 맡은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5일 이 전 검사를 소환해 최 변호사와 주고받은 금품이 사건청탁의 대가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필요할 경우 최 변호사와의 대질심문도 벌일 계획이다.

또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청탁했고, 부산지검 모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한빛고시학원

7급종합반 9급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검찰직 소방직

농업직 9급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